

더불어

민주당

농림축산해양수산조정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일시

2025. 11. 12(수) 배포즉시

배포일시

2025. 11. 12.(수) 10:00

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5.11.12.(수) 07:30~08:30, 국회의원회관 306호
- 참석범위
 - (黨) 윤준병 농해수조정위원장, 문금주·송옥주·임미애·이병진·문대림 위원
 - (政)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

- ☐ 오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윤준병 의원)와 농림축산식품부(송미령 장관)·해양수산부(전재수 장관)는 당정협의를 가졌다.
- ☐ 당정은 '26년 농업·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단계 보완계획, 연내 처리가 필요한 중점 법안,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국민체감 민생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.

< 예산안 국회 심의단계 보완계획 >

- ☐ 당정은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(전년 대비 6.9%↑)된 농업·농촌 분야 '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.
- ☐ 당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이거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, 최근 법률 제·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 등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,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
-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등 증액 제기가 많았던 사업을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·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 -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, 공공형 계절근로는 내년 예산 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.
 - 그밖에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해 136억 원,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으로 116억 원을 증액하고, 무기질비료 가격보조, 스마트농기 자재 공유센터,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, 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.
- 당정은 7조 3,287억 원으로 편성(전년 대비 8.1%↑)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과 함께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- 북극항로를 주도하기 위해 해외 선사들이 활발하게 투자하는 상황에서,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·기술·인력·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하였다.
 - 해양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,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. 신규사업인 만큼, 사업 수요 확보 등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점검하였다.
 -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·부표 보증금제의 경우,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, 편의성 향상, 대상 어구 확대 등 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〈 연내 처리 필요 법안 〉

□ 당정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법안* 및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.

* 빈집법, 온라인도매거래법, 농수산물가격안정법(도매법인 관련), 농어촌기본소득법, 농협법 등

○ 「농지법」은 농지 위 화장실,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내용부터 속도감 있게 개정하고,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「농협법」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농협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내년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농어촌기본소득법」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.

○ 그 외에도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, 「공중방역수의사법」, 「식물방역법」, 「공익직불법」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.

□ 또한, 당정은 새로운 성장동력인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「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」 및 「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」과 총허용어획량(TAC)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도입하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〈 국민체감 민생정책 추진 〉

□ 당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사안 중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□ 먼저, 생산자-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, 효능감 높은 유통구조 개혁과 서민 물가 안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- 우선,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, 유형별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·평가하여 유통비용 절감 등 정책효과가 큰 거래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거래 전수조사 및 이상거래 자동 감지 체계를 도입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기존 도매시장 경쟁을 추진·제도화하기 위해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(농안법 개정), 평가체계 개편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이와 함께 당정은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다.

- 농산물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상시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시 패널티를 마련하는 등 할인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아울러,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대형·중소 유통경로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,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의 비중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다.

□ 당정은 섬 주민 및 어민 등 해양수산분야의 정책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.

- 섬 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해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체 및 연계 수송방안 마련과 함께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.
- 이상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비율을 50%에서 70%로 상향하고,

재해예방에 노력하는 어가에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.

- 핵심수출품목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김산업 발전을 위해 김산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.

-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력하고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, 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.





<담당> 정책위원회 농림축산 수석전문위원 : 010-8828-8548

정책위원회 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: 010-9837-6300